新지역발전정책 시리즈 2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

집필

김선배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김영삼 지식경제부 과장
박용규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홍진기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비매품

9 788993 721010 94320

ISBN 978-89-93721-01-0
ISBN 978-89-93721-03-4(세트)

新지역발전정책시리즈 2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

新지역발전정책 시리즈 2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

광역경제권의 신성장동력을 찾아서

광역경제권 선도산업은 지역들이 상생하고 발전적으로 경쟁하는 지역발전모델이다. 또한 광역경제권의 대표산업으로서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고 지역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물론 선진 한국을 이끄는 신성장동력이 될 것이다

MKE 지식경제부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

kotef 한국산업기술재단 Korea Industrial Technology Foundation

新지역발전정책 시리즈 2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

新지역발전정책 시리즈 2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

新지역발전정책 시리즈 2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
발행일 2009년 4월
발행처 지식경제부, (재)한국산업기술재단
집필 김선배, 김영삼, 박용규, 홍진기
기획 (재)한국산업기술재단 지역산업실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02-6009-3000
편집 · 인쇄 (주)코리아프린테크
02-2264-3325

新지역발전정책 시리즈 2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

지식경제부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
한국산업기술재단 Korea Industrial Technology Foundation

발간사

오늘날 세계는 지역의 경쟁력이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영국 · 프랑스 ·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은 지역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의 지역을 광역단위로 개편하고 있으며 이를 뒷받침하는 이론적 근거들도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국토균형발전을 명분으로 지역 간 불균형 해소와 자립형 지방화 촉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추구해 왔으나, 산술적 · 결과적 균형에 집착한 나머지 실질적인 지역발전과 국가경쟁력으로의 연계에는 한계를 보여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때에 한국산업기술재단에서는 정부와 지역의 경제정책 관계자 분들께 도움을 드리고자 광역경제권 정책을 중심으로《新지역발전정책 시리즈》1, 2, 3권을 발간하였습니다. 이 책은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新지역발전정책의 핵심적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하였습니다.

1권에는 '일자리와 삶의 질이 보장되는 경쟁력 있는 지역창조'를 비전으로 추진하고 있는 新지역발전정책의 내용과 광역경제권 구축 방향과 과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주요 내용과 해설 등을 수록하였습니다.

2권에서는 광역경제권의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5+2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사업의 추진방향, 광역경제권 선도산업별 프로젝트의 주요 내용 및 추진체계 등을 정리하였습니다.

3권에서는 영국, 프랑스, 일본 등 해외 선진국의 광역클러스터 정책 동향을 비교 · 분석하고 국내 광역경제권 정책연구 동향을 정리하였습니다.

또한《新지역발전정책 시리즈》는 지역정책 관계자 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그 동안 정책형성 과정에서 논의된 사항들을 찾기 쉽게 집대성하였을 뿐 아니라, 피상적 수준에 머물러 있던 내용들까지도 심화시켜 수록하였습니다.

끝으로 이 책의 발간에 도움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관련 전문가 분들과 지식경제부, 지역발전위원회 관계자 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 책의 편집과 출판을 위해 힘써준 지역산업실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한국산업기술재단은 앞으로도 지역정책의 질적 발전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2009년 4월

한국산업기술재단

이사장 김용근

Contents

新지역발전정책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

발간사 04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사업의 추진방향 08
김영삼 지식경제부 과장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프로젝트 계획 수립지침 24
박용규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사업의 추진체계 구축방안 46
홍진기, 김선배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광역경제권 선도산업별 프로젝트 주요내용 60
편집자

글. 김영삼
지식경제부 과장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사업의 추진방향

from Regions to the Global

이제 세계는 '국가 경쟁의 시대'를 지나 '장소 경쟁의 시대'에 접어들었다. 프랑스의 석학 자크 아탈리(Jacques Attali)가 언급한 바와 같이, 정치적인 국경선은 이제 그 의미를 잃어가고 있으며, 세계적인 기업이나 인재는 보다 매력적인 환경이 있는 곳으로 자유롭게 이동하는 '디지털 유목민'화 되어가고 있다.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이 세계 투자자본의 45%를 흡수하고 있으며, 상하이, 베이징권 등의 지역경제권은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 1만 달러를 넘는 '지방대국'으로 성장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 속에서 이제 지역은 하나의 독립된 경제권역이자 상호 간 경쟁단위로서, 국내외 지역과 치열한 산업 및 자본·인재 유치 경쟁을 펼쳐나가야 하는 주체가 되었다. 바야흐로 지역산업이 국가의 역동적 성장동력으로써 재조명되어야 할 시기가 온 것이다.

'장소 경쟁'의 시대

2007년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1인당 국내총생산(GDP) 2만 달러를 달성하는 쾌거를 이루었을 때 놀랍게도 지역내총생산 4만 6,248달러를 달성한 곳이 있었다. 바로 울산광역시이다. 작은 어촌 마을이었던 울산이 이처럼 세계적인 수준의 소득을 창출하는 지역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지역 기업과 산업의 발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울주군, 북구, 남구 할 것 없이 울산 전역에 조선, 자동차, 석유화학 관련 제조업체가 고루 입지해 있을 뿐만 아니라, 현대중공업과 현대자동차가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하여 2008년에는 울산이 우리나라 16개 시·도 중 수출액 1위(7,880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이렇듯 산업과 기업이 발전하면서 1997년 광역시로 승격될 당시 101만 명이던 울산의 인구는 2007년 현재 약 110만 명 수준으로까지 지속적으로 증

가하였고, 노령화지수(65세 이상 인구 대비 14세 이하 인구 비중)가 28.8에 불과해 전국(55.1)에서 가장 낮은 노령화 정도를 보이고 있다.

울산의 경우에서 보듯이 지역의 산업 발전은 지역경제의 선순환구조를 일으켜 살기 좋고 활력 넘치는 지역을 만드는 시발점이 된다. 지역의 산업과 기업 활동은 일자리 창출, 지역 세수(稅收) 증가 등을 유발하여 지역의 자생적 성장을 견인하는 원동력이 되고, 이는 다시 기업과 투자를 유치하여 지역 발전의 내생적 기반을 제공한다. 국가 발전전략의 초점이 지역의 산업 육성에 맞추어져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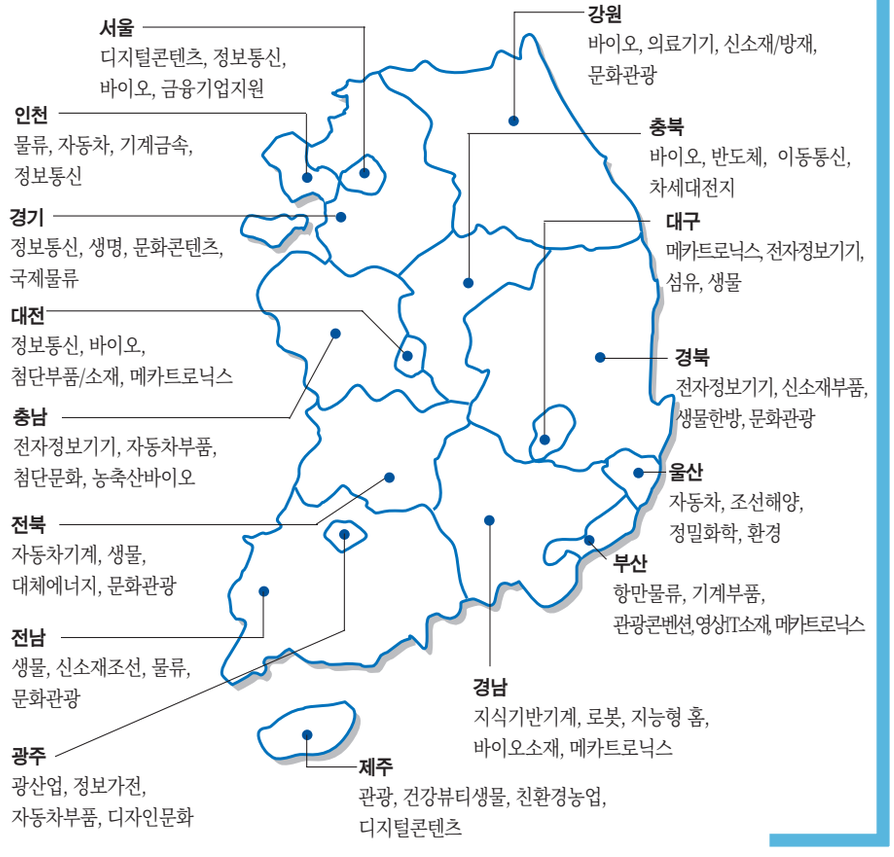
지역전략산업 육성의 추진 (1999년~)

과거에 우리나라는 노동과 자본 등 요소투입형 발전전략을 통해 압축적인 성장을 기록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모델이 한계를 보이면서 1995년 최초로 1인당 국민소득 1만 달러를 넘어선 이후 10년간 성장동력을 찾지 못하고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었다. 이러한 정체기 속에서 지역산업의 경쟁력이 특히 약화되면서 지역경제는 매우 심각한 침체일로에 놓이게 되었다. 더구나 외환위기 이후 지역경제가 더욱 취약해지면서 수도권과 지방의 경제력 격차가 점차 확대되는 추세를 보임에 따라, 정부는 지역산업의 전반적 붕괴위기에 대한 대책으로 각 부처별로 다양한 지역산업 회생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하게 되었다.

지식경제부(당시 산업자원부)는 1999년 대구의 섬유산업을 시작으로 부산의 신발산업, 광주의 광(光)산업, 경남의 기계산업 등 4개 지역진흥사업을 추진하였고, 2002년부터 수도권을 제외한 9개 지역으로 이를 확대하였다. 이렇게 선정된 비수도권 13개 시·도의 전략산업 지원에 2008년까지 총 2조 3천억 원 이상을 투입, 인프라 구축, 기술개발(R&D), 기업지원, 인력양성 등 종합적인 지원을 실시하였다.

특히 지역전략산업의 발전 및 기업지원의 기초가 되는 하드웨어적 혁신 인프라 구축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울산 자동차부품혁신센터와 같이 산업이 밀집한 지역에 전략산업별 특화센터와 공동활용장비를 구축하여, 창업에서부터 R&D, 제품생산, 마케팅까지 근접 지원하는 체계를 갖추었다. 그리고 기업뿐만 아니라 학계와

그림 1-1 시·도별 지역전략산업



특화센터 등의 연구기관 간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공동연구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유기적인 네트워크도 강화하였다. 또한 전략산업 관련 기업의 역량강화를 위해 기술지원, 신기술 보육, 인력양성, 해외마케팅 지원 등 각종 정책 수단을 패키지 방식으로 지원하는 등 '지역산업 발전을 통한 자립형 지방화' 라는 정책 취지의 달성을 위해 노력하였다.

전략산업 육성의 성과와 한계

지역전략산업을 중심으로 한 정부의 지역에 대한 지원은 혁신주도형 지역경제로의 전환 가능성을 일부 보여주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먼저, 전략산업 관련 연구와 기업지원의 기반이 되는 혁신 인프라가 전국에 광범위하게 구축되었다. 산업이 밀집한 지역에 설치된 특화센터가 클러스터 형성을 위한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고, 석·박사 인력 및 기업의 현장경험이 풍부한 고급 기술인력을 확보하여 장비운영, 공동기술 개발, 애로기술 지원, 기술지도 등의 기업지원이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또한, 지역에 대한 R&D 지원을 통해 기술혁신의 저변이 지역으로 확대될 수 있었다. 전국단위 기술개발사업에서 지원받지 못하던 지역기업들이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게 되면서 지역기업들의 기술혁신 역량을 높일 길이 열리게 되었다. 참여기업의 성과도 우수하게 나타났다. 일례로, 2002년 종사자수 88명, 매출액 81억 원의 반도체 후공정 전문회사 세미텍은 충북 지역산업 중점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하면서 2006년에는 종업원 494명, 매출액 595억 원의 기업으로 비약적으로 성장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뿐만 아니라, 제조업 연평균 종사자 수 증가율이 감소하는 상황에서도 전략산업 종사자 수 연평균 증가율은 오히려 상승하여 고용 창출의 효과를 나타냈고, 지역산업의 생산 및 수출이 증대되어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이 수도권을 추월하기도 하였다(2005년 1인당 GRDP 수도권:지방=100:101.4).

무엇보다도, 10년 동안의 집중투자로 인해 광주의 대표산업으로 자리매김한 광(光)산업이나, 10개의 기업으로 시작하여 2006년에는 65개 기업이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강원도 내 수출 1위로 부상한 원주의 의료기기산업과 같은 성공사례가 지역산업 발전에 대한 확신과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갖게 해주었다.

그러나 이상과 같은 정부의 다각적인 노력과 일부 성공사례의 발굴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지역산업의 발전에는 역부족이었다는 평가가 일반적이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정부의 지역전략산업 지원정책이 갖는 문제점이 가장 크게 지적되고 있다.

표 1-1 ● 광역사업과 시·도사업의 위상 비교

구 분	광역경제권사업	시·도 전략산업진흥사업
정책목적	지역산업 경쟁력 제고 (광역권 간 연계 및 협력)	지역균형발전 (지역 간·지역 내 균형)
사업목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유망상품 개발 (제품 및 부품소재, 서비스상품 등)	지역 산업 성장 기반 조성, 정부지원의 범위 확대
산업분야	선택과 집중 (광역권별 선도산업 1~2개)	전략산업의 다변화 (시·도별 전략산업 4개)
정책대상 (평가지표)	유망상품(완제품, 부품소재, 서비스상품 포함) (정량적 > 정성적)	기반 구축, 인프라 조성 (정량적 < 정성적)
사업단위	프로젝트 단위로 통합 (정책조합을 통한 패키지)	기능별로 사업 단위 구분 (기능별·가치사슬별 분리)
재원배분	사업계획서 평가에 의한 차등지원 (인센티브 확대)	시·도별 재원배분 중시 (균형 중시)
특화분야 도출	국가산업기술정책과의 정합성 중시 (통합기술 청사진, 신성장 전략 등)	시·도 자체의 수요조사, 지자체 육성의지 중시
재원조달 (사업유형)	국비 중심 (소프트웨어형 사업 중심)	지방비 매칭 수반 (인프라 중심 大)
지원유형	선도산업 프로젝트 단위로 지원	기능별, 사업별 지원
경쟁요소	가치증진에 주력 (상품개발, 제조·서비스 융합, 브랜드, 국제협력 등)	비용절감에 주력 (입주공간, 시설 및 장비 지원 등)

대표적으로 지역전략산업의 선정이 기존 지역기반산업을 위주로 이루어지거나 기반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유망성과 지역선호만을 앞세워 첨단산업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을 들 수 있다. 그 결과 생물의약, 생물화학 등의 바이오 부문을 전략산업으로 지원한 지역이 강원, 충북, 대전을 포함, 총 10개 지역이나 되는 등 전국적으로 IT, BT 등 일부 업종에 편중되어 지원 역량의 집중이 곤란했다. 이렇듯 중복된 지원으로 인한 한정된 재원의 분산은 막대한 재정투자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산업발전의 효과성을 떨어뜨린다는 비판을 불러왔다.

지역 또는 전략산업별로 산업의 발전 단계에 따라 필요로 하는 지원 내용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부응하는 맞춤형 지원도 부족하여, 인프라 구축, 기술개발, 기업지원 서비스 등의 유사한 지원 수단만을 이용하고 면밀한 수요예측 없이 고가 장비를 구축하여, 장비 활용도가 기대보다 미흡하다는 문제점도 도출되었다.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내에서 자기완결적 산업구조를 갖추려는 폐쇄적 자세로 인해 과열경쟁도 야기되었다. 타 지역 및 타 산업과의 연계에 노력하기보다는 단기적 · 가시적 성과에 치중하여 지원기관 간 네트워크와 협력 등 내실 있는 운영이 부족한 면을 드러내었다. 또한 지역산업을 총괄적으로 기획 · 조정하는 지역혁신체계가 구축되지 못해 R&D와 산업 간의 연계가 부족하였고, 성과평가체계도 정책수단의 유효성을 평가하는데 한계를 드러내, 개별 단위사업의 추진실적 관점에서 획일적으로 평가되어 성과중심의 평가가 되기에는 미흡하였다고 할 수 있다.

新지역발전 정책의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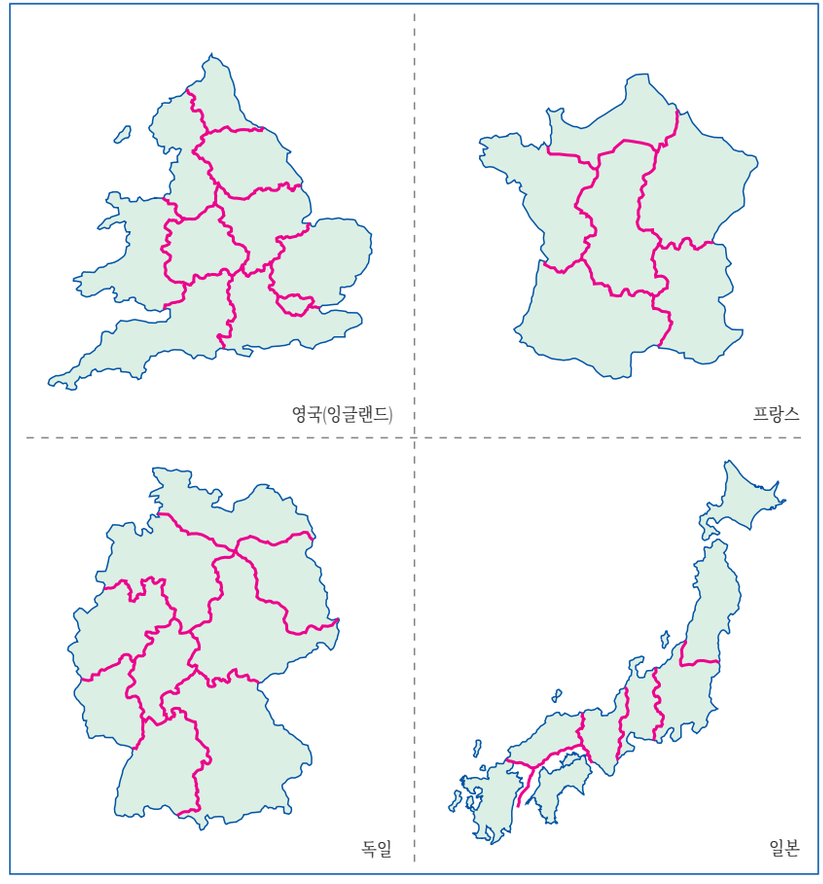
지역정책 패러다임의 전환 : 광역경제권 정책의 도입

지난 10년간의 전략산업 지원으로 전국에 하드웨어적 혁신 인프라가 구축되어 지역 기업을 현장에서 밀착지원하는 기반은 어느 정도 확보되었다. 이제는 지역산업의 본격적인 도약을 위한 성과중심의 정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새로운 정책에 대한 요구가 높아졌다. 즉, 세계화와 지식기반시대에 부응하여 지역의 경쟁력과 국가 경쟁력을 동시에 업그레이드 할 필요가 대두된 것이다.

초고속 교통망 및 정보화의 진전에 따라 국민생활 및 경제활동의 범위가 확장되어 단위행정구역의 경계를 넘어서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는 연계 · 통합적 경제권 육성이 시대적 대세가 되고 있다. 지역의 자체적 혁신 역량을 갖추고 해외 지역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과 같은 주요 선진국들은 공간적 범위를 광역화하고 있다.

프랑스는 현재 22개의 레지옹(Region)을 8개로, 독일은 16개 주를 9개로 광역화하

그림 1-2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의 광역경제권



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영국은 잉글랜드 지역 42개 카운티(County)를 9개 지역으로 나누려는 논의가 힘을 얻고 있으며 일본 또한 47개 도도부현(都道府県)을 8개 광역지방계획권으로 개편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다.

이 같은 과거에 대한 반성과 시대적 흐름에 바탕을 두고 2008년 1월, 이명박 정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는 '새 정부의 창조적 광역발전전략'을 발표하여 새 정부의 지역정책 패러다임을 제시하였다. 이 전략에서는 인구, 산업집적, 도시입지, 인프라, 경제흐름, 역사문화 특수성, 지방행정과 지역정서 등을 기준으로 인구 500만 내외의 5대 광역경제권과 인구 100만 전후의 비교적 독립적인 경제권인 2개 특별광역경제권으로 구성된 '5+2' 광역경제권(5대 광역경제권 :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 동남권, 2대 특별광역경제권: 강원도, 제주특별자치도)을 설정하고, ① 행정구역을 초월한 지역 간 창조적 협력 발전 촉진, ② 특성화 발전을 통한 성장, ③ 광역경제권 발전을 견인하는 신성장동력 구축, ④ 분권 · 협력 · 통합적 광역 행 · 재정 시스템 구축을 4대 기조로 삼아, 과거 균형발전정책과의 차별화를 시도하였다.

지역을 넘어 세계로 : 선도산업의 육성

이러한 광역경제권의 큰 틀 속에서 2008년 9월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보고대회를 통해 지식경제부는 '광역경제권별 신성장 선도산업 육성방안'을 발표하였다. 먼저 정부가 지난 1999년부터 시 · 도별 전략산업 진흥을 위해 모두 2조 3천억 원을 투입하였지만 지역산업을 성장동력화 하고자 했던 당초 기대에는 미치지 못한 현실을 직시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권역별로 차별화된 1~2개 '신성장 선도(先導)산업'에 역량을 집중하는 전략을 발표하였다. 선도산업은 광역경제권별로 지속적인 성장과 일자리창출을 이끄는 대표적인 산업으로서, 전 · 후방산업의 동반발전을 통해 역내 부가가치 창출을 극대화하도록 함과 동시에, 타 광역권 및 세계시장과 경쟁하고 협력하는 개방성을 지향한다.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사업은 기존의 국가사업과 시 · 도사업의 중간적 위치를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국가사업은 국가성장동력의 발굴과 일반적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지역구분 없이 국내 최고의 주체들이 참여하는 하향식으로 기획되는 한편, 시 · 도사업은 지역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 주도의 상향식으로 기획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한편, 광역사업은 지역 간 공통 · 연계 분야의 육성을 위하여 중앙-지방 간의 협력과 조정에 의해 기획 · 추진된다는 점에서 국가사업과 지역사업의 중간에 위치한다. 따라서 광역권 내 산업의 집중도에 근거하여 지역 간 합의에 의해 선도산업을 정하고, 국가산업기술정책과의 정합성을 고려한 특화분야를 도출하여 통합된 형태의 프로젝트를 추진할 예정이다.

자율과 경쟁의 철학 : 광역경제권 선도산업의 추진

지난 9월에 정부는 '5+2 광역경제권 신성장 선도산업 발전방안'을 통해, 지자체의 수요 조사와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친 '광역경제권별 선도산업 구상안'과 2012년까지 전체 지역산업 육성에 5조 5천 억원을 투자하는 등의 지원 전략을 발표하였다.

추진 경과

광역경제권 선도산업은 기존의 지역사업과는 다르게 '자율'을 강조하여 지역 간의 합의에 기반을 둔만큼, 구상안을 바탕으로 지역 간의 합의를 통해 선도산업을 선정하도록 유도하였다. 선도산업의 개념이 광범위하므로, 구체적인 프로젝트 도출을 위해 선도산업 내 국가산업정책에 부합하도록 '신성장동력 비전'과 '지식경제통합기술 청사진'의 과제 중에서 특화분야를 선정하도록 하였다. 특히, 선도산업이 구체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프로젝트는 최종 산출물과 성과를 중심으로 기획하였다. 구체적인 육성 대상으로 유망상품을 정하고 현재의 경쟁력 지위와 3~5년의 사업기간 후 도달할 글로벌 경쟁 지위 목표를 제시하여 유망상품 육성에 필요한 부품소재와 핵심기능, 핵심기술을 결정하였다.

이러한 광역사업에 대한 이해와 프로젝트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민간 전문연구기관인 삼성경제연구소와 공동으로 지역과 지속적인 의사소통을 실시하였다. 먼저 11월에 시 · 도 경제국장 회의를 통해 가이드라인을 확정하고, 이후 대경권을 시작

으로 각 광역권별로 가이드라인 순회 설명회를 실시하였다. 12월에 본격적으로 프로젝트 기획이 시작됨에 따라, 권역별로 2회 이상의 순회 설명회와 수차례의 추가적인 개별 미팅 등 총 20여회에 이르는 컨설팅을 통해 광역사업에 대한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프로젝트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였다.

선도산업과 특화분야가 구체화된 12월 말부터는 각 업종별 검토를 시작하였다. 프로젝트의 타당성과 기술적인 완성도를 높이기 위하여 에너지, 로봇, 기계, 관광 등 분야별 전문가들이 프로젝트에 대해 조언하는 자문위원회를 12월과 1월에 개최하여 기획안의 실현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수정 작업을 계속해나갔다.

사실 이러한 지속적인 의견교환에도 불구하고 진행이 더디게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다. '행정구역'에 익숙하던 지역들끼리 '자율'과 '협력'을 바탕으로 공동의 사업을 추진하기는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지역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광역경제권을 중심으로 한 지역 간 협력을 바탕으로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었고, 광역경제권별로 사업 기획과 지역 간 협력의 경험에 따라 진행 속도에는 차이가 나고 있지만, 2009년 3월 현재 지역의 산업 발전에 한 획을 긋고 나아가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프로젝트가 점차 그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5+2 광역경제권 선도산업과 발전 비전

2월 10일, 호남권을 마지막으로 5+2 광역경제권 선도산업이 모두 확정되었다. 선도산업의 확정은 각 광역경제권이 지역의 여건과 역량을 충분히 고려하여 선도산업 합의안을 제출하면 정부가 이를 수용·확정하는 형식으로 추진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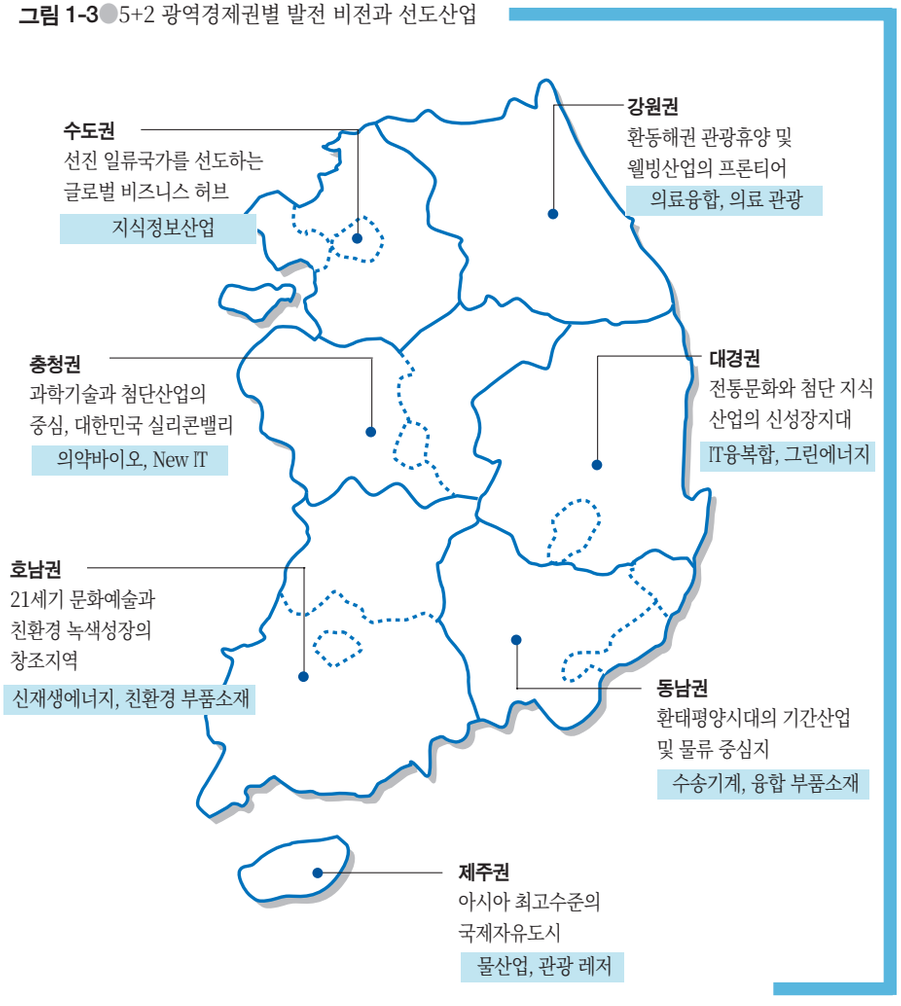
수도권은 이미 첨단제조업과 지식서비스의 70%가 집중되어 있고, 규모의 경제가 가능한 시장 크기도 확보되어 있으므로, 향후 수도권 집중을 심화시키지 않으면서 국가 전체의 성장 파이를 키우고 다른 지역에 긍정적 효과를 미칠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이를 위해서 수도권은 부가가치가 높은 소프트웨어, 서비스 산업 등 지식정보산업을 선도산업으로 확정하였다. 정부는 기업에 부담이 되는 과도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여 수도권을 지식정보산업의 가치사슬을 전국으로 이어주는 중심이 되

표 1-2 ● 광역경제권 선도산업의 추진경과

일자	목적	내용	장소	참석 대상
08.09.24	보고	·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협의	지식경제부	· 지식경제부 산업경제실장 등 · 시·도 경제국장 · 삼성경제연구소
08.09.25	Kick-off	· 광역프로젝트 용역 수행을 위한 상호 협의	지식경제부	· 지식경제부, 삼성경제연구소
08.10.28	회의	· 광역경제권 프로젝트 가이드라인 의견수렴	지식경제부	· 지식경제부, 삼성경제연구소 · 권역별 프로젝트 실무자
08.11.12	선도산업 프로젝트 가이드라인 확정			
08.11.14	보고	·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협의	지식경제부	· 지식경제부 산업경제실장 · 시·도 경제국장 · 삼성경제연구소
08.11.18~21	1차 컨설팅	· 대경, 충청, 동남, 제주권 선도프로젝트 가이드라인 설명회	각 지역	· 대경, 충청, 동남, 제주권역 프로젝트 실무자 · 지식경제부, 삼성경제연구소
08.12.04~05	2차 컨설팅 (종합)	· 권역별 프로젝트 사업계획서 발표 및 질의응답	지식경제부	· 대경, 충청, 동남, 강원, 제주 권역별 프로젝트 실무자 · 지식경제부, 삼성경제연구소
08.12.22~23	3차 컨설팅 (종합, 외부자문)	· 광역 선도산업 프로젝트 제1차 자문평가회의	삼성경제연구소	· 대경, 충청, 동남, 호남권역별 실무자 · 강원, 제주, 충청, 대경, 수도권역별 실무자 · 지식경제부, 삼성경제연구소, 각 분야별 외부 전문가(자문위원)
09.01.16	4차 컨설팅 (종합, 외부자문)	· 광역 선도산업 프로젝트 제2차 자문평가회의	지식경제부	· 지식경제부, 삼성경제연구소 · 각 분야별 외부전문가(자문위원) · 충청, 대경, 동남, 강원, 제주권 사업계획수립 및 지자체 담당자
09.02.06	외부 자문회의	· 신재생에너지 분야(수소연료전지) 프로젝트 사업계획 발표 및 외부전문가 자문	지식경제부	· 지식경제부 · 삼성경제연구소 · 대경권 수소연료전지 프로젝트 사업계획 수립담당자 및 관계자
09.02.13	외부 자문회의	· 신재생에너지 분야(태양광, 풍력) 프로젝트 사업계획 발표 및 외부전문가 자문	지식경제부	· 지식경제부 · 삼성경제연구소 · 외부자문위원 · 호남권, 대경권, 충청권의 해당 프로젝트 사업계획 수립담당자 및 관계자
09.03.24~27	선도산업 계획평가	· 프로젝트별 사업계획 평가 (20개)	부산	· 지역정책/업종별평가위원 · 시·도·프로젝트 담당자 · 지식경제부, 삼성경제연구소, 한국산업기술재단

그림 1-3 5+2 광역경제권별 발전 비전과 선도산업



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충청권은 수도권의 우수한 인력과 기술, 시장에 접근하기 쉽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대덕특구를 중심으로 우수한 인적자원과 R&D 역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오송, 오창, 아산 등을 중심으로 바이오와 반도체 등 첨단기업들이 모여들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충청권은 바이오와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뉴 IT산업을 선도산업으로 도출하고 글로벌 신약 허브 구축, 바이오 소재 개발, 뉴 IT 부품소재 개발 등을 구체적인 프로젝트로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호남권은 일조량과 조수간만차 등 태양광이나 조력발전에 유리한 자연조건을 갖추고 있어 신재생에너지 기업들이 속속 모여들고 있다. 이런 기업 수요를 바탕으로 호남권은 선도산업으로 신재생에너지와 친환경 부품소재를 선도산업으로 확정하였다. 앞으로 호남권은 태양전지 등 발전장비 · 부품 거점사업과 차세대 LED 조명 개발 등의 지원 사업을 통하여 산업구조를 농업에서 제조업으로 빠르게 변화시키고 녹색성장을 주도하는 허브이자 환황해경제권 형성의 핵심축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동남권은 부산과 울산, 경남으로 구성되어 수출입 물류의 거점이자 조선, 자동차 등 주력 기간산업의 최대 집적지역이다. 동남권의 성장기회는 전통적 수송기계 산업에 IT와 신소재 및 디자인 역량을 융합하여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도약하는 데에서 찾을 수 있으므로, 하이브리드 자동차 등 그린카 오토벨트, 해상플랜트 거점 구축, 기계기반 융합 부품소재 등에 지역의 관심을 모아 수송기계와 융합 부품소재를 선도산업으로 채택하였다. 앞으로 동남권이 저탄소 수송시스템 공급의 핵심기지이자 산업 간 융합과 부품소재산업이 동반발전하는 성공모델이 될 것으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구와 경북으로 구성된 대경권은 전통적으로 철강, 전자, 섬유산업의 중심지이고 800여 개가 넘는 이동통신 기업체들이 모여 IT산업 클러스터를 형성한 곳이기도 하다. 아울러, 방사광 가속기 등 우수한 R&D 기반을 바탕으로 에너지 관련 연구개발도 활발히 나타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대경권은 첨단 이동통신 분야와 차세대 에너지 분야에서 성장의 기회를 찾고 IT융복합과 그린에너지를 선도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IT, 메카트로닉스 등을 활용하여 차세대 의료기기와 실용로봇의 핵심기술을 개발하는 동시에, 태양광 부품소재와 수소연료전지 등 미래의 녹색에너지 개발을 위한 전초기지로 대경권의 도약이 기대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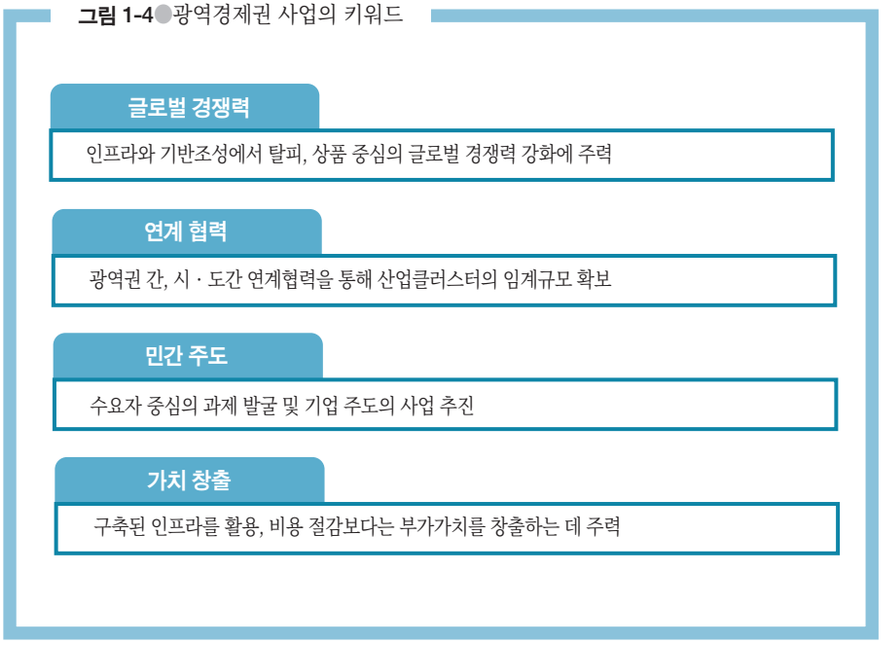
강원권은 권역의 82%가 수목 등 산림 휴양자원인 국토의 허파와 같은 지역이다. 기존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의 성과로 현재는 강원도에 의료기기를 중심으로 새로

운 산업기반도 형성되고 있다. 따라서, 휴양자원과 의료산업을 접목한 동북아 의료관광 및 의료융합을 선도산업으로 확정, 강원권은 앞으로 동북아 의료관광의 거점이자 첨단 의료융복합 산업의 글로벌 사업화 허브로 거듭날 예정이다.

제주권은 국제자유도시가 되기 위해 마카오, 홍콩과 치열한 경쟁을 해야 한다. 아울러 지하수 등 청정자원을 산업자원화 하는 데에서 새로운 성장기회를 찾을 수 있다. 제주권은 청정자원을 연관산업과 접목하여 물산업과 리조트에 기반을 둔 전시컨벤션 산업을 선도산업으로 확정하고, 국제적인 웰빙 산업기지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광역사업은 지역 간 협력 및 연계를 통해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정책 목표이다. 따라서 권역 내의 협력뿐만 아니라 권역 간 협력 또한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권장되고 있다. 예컨대 강원도의 선도산업인 의료 · 관광을 수도권의 선도산업인 지식정보산업과 연계하여 원격 의료체계를 구축한다면 우리나라 의료 및 정보산업에 새로운 시장이 창출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시너지효과를 극대화

그림 1-4 광역경제권 사업의 키워드



할 수 있도록 광역경제권 간 우수한 협력 사업에는 추가적인 재정지원 등의 인센티브가 주어질 예정이다.

선도산업 육성의 기대 효과

선도산업 추진과정에서는 벌써부터 광역권 간 협력과 경쟁의 문화가 나타나고 있다. 광역권 내 지역 간에는 선도산업 합의안 도출 과정에서 협력과 연계의 필요성을 자각할 수 있었으며, 광역권 간에는 선도산업 프로젝트 기획과 사업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으로 발전적인 경쟁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또한, 선도산업 프로젝트 기획 과정에서 중앙과 지방 간의 의견 교환은 정부의 광역경제권 중심 지역발전전략에 대한 비전을 공유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었다. 이처럼 선도산업은 추진 과정에서부터 각 광역권이 상생하고 발전적으로 경쟁하는 지역발전모델이 되고 있다.

앞으로 선도산업은 광역경제권별로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대표적 산업이 되어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과 국가의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산업 발전으로 실질적 균형발전을 달성하고 아울러 해당산업의 국제시장 경쟁력까지 확보되어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선도산업의 발전을 기대해본다.

선도산업의 성공을 위한 제언

선도산업은 지방에 기업의 투자가 촉진되었을 때 성공적으로 육성될 수 있을 것이다. 광역경제권 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인력 양성, 인프라 구축 등의 사업과 연계되어야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될 것이므로, 지식경제부 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광역경제권과 선도산업의 성공을 위하여 역량을 결집할 것이다.

지역 차원에서는 '나눠먹기'가 아니라 광역권 내 · 외의 상생발전을 위한 사업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특히, 선도산업은 지역의 주도로 기획하고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지방자치제도 16년간 쌓아온 지역의 역량을 총 결집하여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